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배포 2026. 11. 23.(월)

지출구조조정은 집행률 외에도 사업 성과, 유사·중복여부, 지원방식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23.(월) 한국일보는 「'저성과·집행부진 사업 정리'라더니... 정부가 깎거나 늘린 사업 간 집행률 차이 없어」 기사에서

○ 정부가 '27년 예산안에서 2,469개 사업, 9조 933억원을 삭감했으나, 삭감 사업과 증액·동결 사업의 집행률이 비슷하여 저성과·비효율 사업 정리 원칙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불분명하며,

○ 집행률이 100%였던 소공인 특화지원, 아이돌봄서비스 등도 예산이 줄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□ 정부는 '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**최초로 「지출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방안」**을 **마련·공개**하였으며, 이에 따라 **모든 재정사업**을 **원점**에서 **재검토**하였습니다.

□ 지출구조조정은 공개된 기준에 따라 집행률뿐만 아니라 **사업 성과, 유사·중복여부, 지원방식의 적정성** 등을 **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추진하였으며,

○ **집행률이 높더라도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**하거나 **유사·중복 사업**이 있거나, **정책여건 변화로 지원방식 개편이 필요**한 경우에는 지출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○ 따라서 감액 사업과 증액·동결 사업의 집행률이 비슷하다는 점만으로 구조조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

□ 기사에 언급된 사업들의 지출구조조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❶ **(소공인 특화지원)**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최근 지원규모가 급격히 확대('20년 30억원 → '26년 980억원)되는 과정에서 **일부 지원기업**에서 **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**되어 중기부에서 **사업의 전면 개편을 요구**하였습니다.

- 이에 따라 그간 **분산 추진***되던 스마트제조·판로개척·클린제조 등 소공인 지원을 「**혁신소공인 특화지원**」으로 **통폐합**하여 성장의지와 역량을 갖춘 소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**효율화**하였습니다.

* "소공인 특화사업은 타 사업과 유사·중복되는 내용이 존재하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복을 최소화하여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" (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'감액')

❷ **(아이돌봄서비스)** 아이돌봄 사업은 **도입 초기**('07) **성공적 안착**을 위해 유사 보육사업 대비 **높은 국고보조율(70%)**로 지원하였으나,

- **사업 성숙도, 유사사업 보조율** 등을 감안하여 성평등부에서 **국고보조율**을 70%에서 **50%로 조정 요구**하였으며, 보조율 조정 과정에서 **지방재정관리위원회**를 통해 **행안부·지방정부 의견을 수렴**하는 등 **관련 절차도 이행**하였습니다.

□ 정부는 앞으로도 **성과가 낮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**하고, **절감한 재원**은 **국가 핵심과제에 재투자**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는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**지출구조조정을 지속 추진**해 나갈 계획입니다.

담당 부서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 사무관 권영현 (hyeon1122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